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1
----------	------

제출연월일: 2018. 8. 23.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관지구 건축제한 사항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삭제로 제7조제1항 제2호다목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 조문 삭제(안 제7조)
- 다. 상위법령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누락된 내용 반영(안 제8조의2)

3. 근거법규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6조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82조, 제114조제6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2018. 7. 16. ~ 2018. 8. 6.(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및 자원”을 “과 자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조체내”를 “구조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미관도로(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로, “설치코자”를 “설치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 목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관도로변”을 “시가지경관도로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미관도로”를 “시가지경관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부적합한”을 “적합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로미관”을 “가로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1호까지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사용승인”을 “제11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로, “사용승인검사 대행자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사대행자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한지를”로 한다.

제4조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도시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도시계획주무관”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가부동수일 때”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로 한다.

제6조의5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한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별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과 자원----- -----.
제2장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제2장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제3조(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광역시 조례 제37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 시가지경관지구 ----- ----- -----.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u>구조체</u> <u>내</u>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3. (생략)</p> <p>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을 식재하여야 하며, <u>미관도로</u>(<u>미관지구</u>와 접한 주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 부득이 바닥면과 달리 <u>설치코자</u>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여야 하고 화단에 식재하는 수목은 건물과 조화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야 한다.</p> <p>5.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하여야 한다.</p> <p>가.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부분의 바닥은 보도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인</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구조체</u> <u>내</u>----- -----.</p> <p>3. (현행과 같음)</p> <p>4. ----- ----- -----, <u>시가지경관도로</u> (<u>시가지경관지구</u>----- ----- ----- <u>설치</u> <u>하코자</u> ----- ----- -----.</p> <p>5. ----- ----- -----.</p> <p>가. ----- ----- -----</p>

현행	개정안
<p>도와 <u>동일</u> 재료로 하여야 한다.</p> <p>나. <u>미관도로변</u>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u>미관도로</u>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 보행자 도로를 기준으로 1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6. (생략)</p> <p>7.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상가의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시형 셔터가 영업의 성격상 보안이나 미관 등에 <u>부적합한</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8. ~ 10. (생략)</p> <p>11.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u>가로미관</u>을 위하여 이동식 진열대나 상품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제1호부터 <u>제11호까지는</u> 건축물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사용승인 검사자 또는 <u>사용승인검사</u></p>	<p>----- <u>같은</u> -----.</p> <p>나. <u>시가지경관도로변</u>-----</p> <p>-----</p> <p>-----</p> <p>-----.</p> <p>다. <u>시가지경관도로</u>-----</p> <p>-----</p> <p>-----</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7. -----</p> <p>-----</p> <p>-----</p> <p>-----.</p> <p>-----</p> <p><u>적합하지 않는</u> -----</p> <p>-----.</p> <p>8. ~ 10. (현행과 같음)</p> <p>11. ----- <u>가로경관</u></p> <p>-----</p> <p>-----.</p> <p>12. ----- <u>제11호에 따라</u>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p> <p>----- <u>검사대행자가</u></p>

현행	개정안
<p><u>대행자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u> 확인하여야 한다.</p> <p>제4조(적용의 완화) 제3조의 적용이 <u>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u>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6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과장이</u> 되고, 서기는 <u>도시계획주무관이</u> 된다.</p> <p>⑤ ~ ⑩ (생략)</p> <p>제6조의2(서면심의) ① (생략)</p> <p>② 서면심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u>가부동수일 때</u>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③ · ④ (생략)</p> <p>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략)</p> <p>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u>위촉 해제</u>할 수 있다.</p>	<p><u>건축허가서와 동일한지를</u> ----- -----.</p> <p>제4조(적용의 완화) ----- <u>시가지경관지구</u>----- ----- ----- -----.</p> <p>제6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업무담당 부서장</u>----- ----- <u>업무담당 계장</u>-----.</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서면심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5(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① ----- ----- ----- ----- <u>해촉</u>----- -----.</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제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u>각호와</u>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제1분과위원회</p> <p>가. (생략)</p> <p>나. 광역시 조례 제34조, 제35조에 따른 <u>미관지구</u> 관련 사항</p> <p>다. (생략)</p> <p>2. 제2분과위원회</p> <p>가.·나. (생략)</p> <p>다.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u>이의신청</u>에 관한 사항</p> <p>② ~ ⑥ (생략)</p> <p><u><신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 (분과위원회) ① -----</p> <p>-----</p> <p>----- <u>각 호와</u> -----</p> <p>-----.</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 <u>시가지경관지구</u> -----</p> <p>다. (현행과 같음)</p> <p>2.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한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삭제 <2016. 1. 19.>

제118조 삭제 <2016. 1. 19.>

제119조 삭제 <2016. 1. 19.>

제120조 삭제 <2016. 1.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 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

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6. 12. 30.>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1. 위원회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26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도시과		
	담당자명	김상태	전화번호	052-290-391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7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的主要内容는 가. 미관지구 건축제한 사항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1호나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삭제로 제7조제1항제2호의다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 조문 삭제(안 제2장), 다. 상위법령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우리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누락된 내용 반영(안 제8조의2) 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7월 13일

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유창영/052-290-4903)

도시과장 귀하